

보 도 자 료

일시

2017년 3월 16일(목)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바꾸자! 헬 조선! 만들자! 노동존중 평등사회!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2017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13시

장 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 대선 본격 돌입
- ▶ 촛불은 박근혜와 공범자 구속처벌, 황교안 퇴진, 적폐청산과 촛불개혁 요구를 내걸고 주말 집중집회를 이어가기로 함(3/25, 4/15)
- ▶ 민주노총은 촛불과 함께 광장과 거리투쟁을 하면서 촛불이 만든 5월 조기대선이 정당, 정치인들의 ‘갯밥선거’가 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함
- ▶ 또한 이번 대선은 박근혜정권과 재벌자본이 합작해 만든 ‘헬 조선’을 바꾸는 사회대개조의 적기(適期)로 규정함
- ▶ 이에 민주노총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세상을 상징하는 ‘헬 조선’의 기둥뿌리를 해체하고,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시기와 대선 이후 새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이고 집중적인 투쟁과 사회적 총파업 그리고 노-정 직접교섭을 요구할 계획임
- ▶ 헬 조선을 타파하고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타파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 ▲국가기구 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불법 양대지침 및 성과퇴출제 폐기 등이다.
- ▶ 민주노총은 대선시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요구를 내걸고 광장정치를 지속할 것이며, 6월 말과 7월초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지난 3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 ▶ 이에 민주노총은 3월 16일 중집위원들이 참가하는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계획과 입장을 밝힌다.

2. 진행계획

사회 : 대변인 남정수

- ▶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취지 및 여는 발언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 민주노총 대선투쟁 및 사회적 총과업 계획
: 이영주 사무총장

- ▶ 민주노총 각 산별조직 대선투쟁 주요 요구와 계획 발표
 1. 금속노조 오상룡 사무처장
 2.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3.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4. 서비스산업연맹 이선규 수석부위원장
 5. 전교조 이을재 부위원장
 6.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 ▶ 민주노총 대선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낭독

- ▶ ‘촛불대선과 노동자의 요구’ 퍼포먼스

[붙임]

1. 금속노조 대선 요구 및 투쟁계획
2. 공공운수노조 대선 정책요구 및 실천계획
3. 보건의료노조 2017년 대선요구와 계획
4. 서비스산업연맹 대선의제와 요구
5. 전교조 2017 대선 핵심과제와 주요과제
6.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 대선 6대 쟁취 요구

[첨부]

- 민주노총 2017 대선의제와 요구

2017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투쟁 및 사회적 총파업 계획

1.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투쟁

1) 슬로건

“재벌독식 불평등사회” 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로!”
 “저임금·비정규노동사회” 에서 “노동자가 살맛나는 평등사회로!”

2) 5대 의제와 10대 요구

- 별도 항목 참조

5대 의제	10대 요구
체제 청산	①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 ② 재벌독식체제 해체
비정규직철폐. 좋은 일자리	③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④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노조할 권리· 노동3권	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⑥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사회공공성· 사회안전망	⑦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⑧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민주주의· 평화사회	⑨ ‘보수정치 독식구조’ 개혁과 자유권 보장 ⑩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

3) 대선 대응 기본 방침

- 1/ 2017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퇴진 대중투쟁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으로서,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 으로 규정하고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한다.
- 2/ 3월 29일 각 지역별 대선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2017 투쟁실천단 발대식과 병행하여 조직한다.
- 3/ 4월 15일(안) 노동자 민중의 대선 요구 실현을 위한 민중대회(가)를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하여 진행한다.
- 4/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
- 5/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금지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6/ 투표방침: 추후 확정

4) 주요 사업 방향

(1) 현장과 함께 하는 전조직적 대선 투쟁

- ① 최저임금 1만원 · 비정규직 철폐 · 재벌체제 해체 ·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투쟁본부 구축
 -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까지 2017 요구 실현을 위한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
- ② 2017 투쟁실천단
 - 지역과 현장에서 조합원, 미조직 노동자, 촛불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실천 조직화
 - 박근혜 체제 청산과 대선투쟁, 사회적 총파업과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까지 2017년 투쟁 전반에 앞장서는 선도적 실천부대
- ③ 현장 실천
 - 박근혜 퇴진 투쟁, 광장 촛불을 통한 자신감을 토대로 2017년 민주노총 요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실천 조직화: 주 1회 현장 선전전(출퇴근/중식 선전전), 민주노총 요구 현수막 사업장 게시, 촛불과 함께 하는 지역 조직화 등
 - 노동자 계급 투표 조직화
 - 반노동, 친재벌 입장 타격 투쟁 및 낙선 운동

(2) 광장 촛불과 함께 하는 대선 투쟁

- ① 광장 촛불의 계승
 - 촛불의 요구, 사회적 요구로서의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요구의 전면화
 - 한국사회를 바꿔내는 사회적 총파업으로의 계승
- ② 촛불과 함께 하는 투쟁
 - 3.25. 및 4.15. 촛불집회 대규모 결집
 - 한국사회의 대개혁 요구 ‘촛불 시즌 2의 시작’ 으로서의 대선투쟁

(3) 의제 중심의 대선 투쟁

- ① 박근혜 적폐 청산 대선 투쟁
 - 박근혜 구속, 부역 · 공범 세력 청산, 박근혜 정책 전면 중단
 - 6대 현안 즉각 실현: 4.16. 세월호 3주기 투쟁, 사드 배치 저지 투쟁(성주 민주노총 집중투쟁) 등
 - 우선개혁입법 쟁취: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위협의 외주화 금지
- ② 한국사회 대개혁 의제 전면화
 - 촛불투쟁, 의제별 대규모 결집 등을 통한 의제 전면화
 - 주요 계기점: 3.25. 및 4.15. 촛불, 3.29. 민주노총 결의대회, 5.1. 세계 노동절 대회 등
- ③ 대선후보 압박 투쟁

-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정책질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노동 의제 공론화와 대중적 압박
- 반노동, 친재벌 입장 타격 투쟁 및 낙선 운동
- 정책 대응
 -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대선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 신정부 노동정책 전면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 우선적 행정조치 압박 등
 - 신정부의 첫 번째 민생과제로서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

2. 사회적 총파업 계획

박근혜 퇴진! 그 다음은
최저임금1만원 · 비정규직철폐 · 재벌체제 해체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변한 겁니다

1) 취지와 기초

- 신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항쟁 · 대선투쟁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
-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저임금 타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요구를 결합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의 위상 강화
- 신정부 사회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 개입
- 의제별 · 영역별 투쟁을 묶어 시기를 6월 말로 집중, 80만 조합원 전조직적 투쟁 전개
- 미조직노동자 · 청년 · 중소기업 · 시민사회단체 등 주체의 확장으로 전사회적 투쟁 조직
- 대중투쟁과 사회적 총파업에 따른 노-정 교섭 병행
- 상반기 사회적 총파업을 통한 하반기 투쟁기반 마련 및 미조직노동자 적극 조직화

2) 기본 방침

- 1/ 비정규직 철폐 · 최저임금 1만원 · 저임금구조 타파를 포함한 5대 핵심 투쟁 요구를 결고 6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 2/ 6월 30일 지역별 총파업 대회 조직화와 함께, 미조직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조직하고 지역별 촛불 조직화 등으로 광장 촛불을 열어간다.
- 3/ 저임금 · 비정규 단위 선제파업을 시작으로, 산별연맹, 단위노조는 임단협 및 노동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시기집중 파업투쟁으로 결합한다.
- 4/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하고, 총파업, 파상 파업 등으로 이어가며, 7월 8일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각계 기층 민중이 함께 하는 총궐기 및 촛불 행동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3) 사회적 총파업의 상과 투쟁계획

(1) 사회적 총파업이란?

- 조직노동자 · 미조직노동자, 청년학생, 중소기업자, 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전략투쟁

- 2017년은 한국사회의 대안적 재편을 위한 전략투쟁
- 광장의 투쟁을 이어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
- 열린 공간에서 노동의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확장
- 최저임금 결정시기 6월은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시기, 신정부 사회·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적극 개입을 위한 전략투쟁
- 하반기 투쟁기반 마련 및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전선 구축

(2) 사회적 총파업의 요구는?

- 민주노총 2017년 5대 핵심 요구

(3) 사회적 총파업의 방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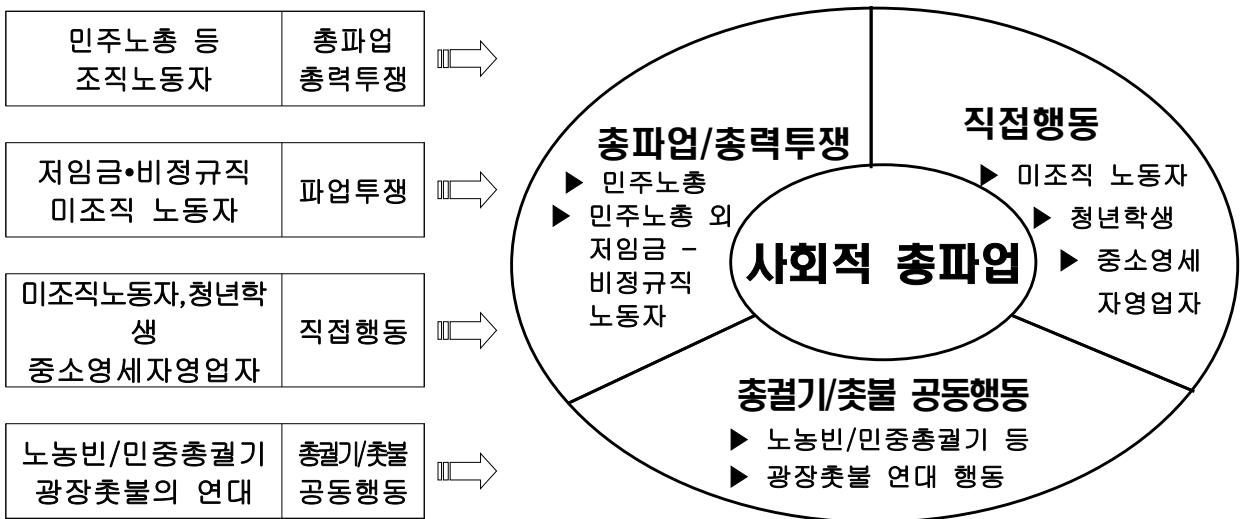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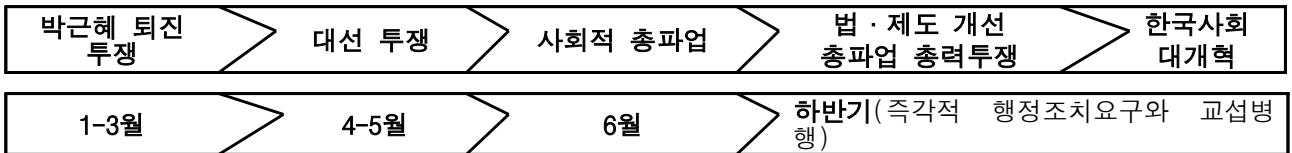
- 저임금·비정규직 주체의 파업투쟁을 필두로 한 전조직적 공동행동
- 민주노총 산별연맹, 단위노조 임단협 및 6월말 시기집중 파업투쟁
- 미조직 노동자, 중소기업자영업자, 청년학생 등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동행동
- 노농빈 민중총궐기단위의 공동투쟁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의 공동행동
- 대중투쟁과 사회적 총파업에 따른 노-정교섭 병행

(4) 집중시기는?

- 6월
 - 대선시기 사회적요구에 대한 조직화를 통해 미조직 및 광범위한 대중 조직의 결집시기
 - 한국사회대개혁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신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시기 (6월말-7월초 최임1만원에 대한 답을 내야 하는 시기 (법적 구속력))
 - 신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경제·노동 정책 등 한국사회대개혁의 방향으로 기초를 명확히 확보, 쟁취해야 하는 시기
- 사회적 총파업주간 설정 :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식 실천배치
 - 총파업 돌입 : 6월 30일 (지역별 총파업 대회, 미조직노동자/시민·사회단체 참가 조직, 지역별 촛불 거점 등 광장을 여는 방식 병행)
 - 총파업·파상파업 : 7월 첫째주
 - : 각 부문별, 의제별 요구를 갖고 총파업·파상파업·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국사회대개혁의 요구를 제기
 - (가칭)총궐기 : 7월 8일(토)
 - : 사회적 총파업 주간 총화 및 노동을 비롯한 모든 진영의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궐기

4) 사업흐름 개괄

시 기	사 업 목 표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내용 (안)	
4월	대선시기 요구 쟁점화	4월초	▶ 최임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 ▶ 미조직노동자 토크 콘서트
		4.15	▶ 촛불
5월	사회적 총파업 공론화	5.1	▶ 세계노동절
		5월중	▶ 최임1만원, 비정규직철폐 부문별 투쟁 (알바매장 집중선전,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등) ▶ 각종 토론회, 집담회, 미조직노동자 토크 콘서트
		5월말	▶ 최임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대규모 문화제
6월	사회적 총파업 총력 조직화	6.5~29	▶ 전국순회투쟁 - 지역별 차별철폐대행진 ▶ 부문별 대규모 행사 (최임 1만원 알바들의 행진, 종교행사-시국미사, 법회, 기도회 등)
6.30~7.8	사회적 총파업 주간	6.30	▶ 사회적 총파업 (지역별 총파업대회, 미조직노동자/시민/사회단체 참가, 지역별 촛불 거점 등 광장 병행)
		7.1~7	▶ 총파업 / 파상파업 (각 부문별/의제별 요구로 총파업/파상파업/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한국사회 대개혁 요구 제기)
		7.8(토)	▶ 총궐기(가칭) (사회적 총파업 주간 총화 및 한국사회대개혁 총궐기)
7월	평가 및 계획	7월말	▶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사업 계획
8월~12월	요구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	이후 구체화	▶ 요구 실현을 위한 즉각적 행정 조치 요구 / 교섭 병행 ▶ 법·제도 개선 투쟁 /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바꾸자! 헬 조선, 만들자! 노동존중 평등사회!
민주노총 2017년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헬 조선을 허무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1600만 촛불은 누구인가?

알바를 전전하며 불공정, 불평등 세상에 분노한 헬 조선 청년들이다.

남성에 비해 64% 수준의 차별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여성들이다.

명예퇴직,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는 넥타이 노동자들이다.

흙 수저, 금 수저로 갈라진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혁명하자고 외치는 청소년들이다.

1년, 2년마다 반복 해고되는 시급 6,470원 일자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노조탄압과 파괴, 해고에 맞서 사업장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촛불이었다.

이 모든 촛불들이 모여 박근혜를 탄핵했고, 헬 조선 대한민국을 바꾸자 외쳤다.

박근혜 없는 봄이 시작되었다. 촛불혁명이 만든 조기대선도 시작되었다.

촛불에 편승한 대선주자들은 넘쳐나지만 적폐정책은 강행되고 개혁입법은 유보되고 있다.

촛불대선이 잣밥대선이 되고, ‘장미대선’이 ‘장밋빛 환상’으로 끝난다면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만든 대선과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적기다.

헬 조선을 허물자는 촛불의 요구는 이천만 노동자의 노동적폐를 청산하자는 요구이기도 하다.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세력과 그들이 만든 헬 조선은 여전히 견고하다.

불평등, 불공정, 천만 비정규직, 재벌독식 헬 조선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권력이 재벌의 배를 불리고, 재벌이 권력이 된 70년 역사였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재벌이 쌓아올린 부의 바벨탑은 노동의 권리를 짓밟고 착취한 전리품이었다.

재벌독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의 확대, 무력화된 노동3권이 노동적폐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불러왔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복지부동 체제가 아무런 저항 없는 블랙리스트를 가능케 했다.

청와대 권력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체제가 재벌들의 배만 불러왔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부 노동개악을 자행하는 더러운 체제가 비정규직 천만 시대를 만들었다.

단호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헬 조선 공화국’의 기둥뿌리를 뽑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권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독식체제를 해체하라.
재벌의 뇌물대가, 불법 양대지침, 성과퇴출제 노동개악을 폐기하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저임금을 타파하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년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별교섭 법제화 등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라.
생명.안전 존중과 평생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선택의 여지조차 가로막는 보수정치 독식구조 선거정치체도를 개혁하라.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 백해무익한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대선시기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요구를 들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올 것이다.
헬 조선을 바꾸라는 촛불과 노동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선후보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새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노동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민주주의를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사회적 총파업은 그 정점이 될 것이다.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되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촛불은 보여주었다.
촛불은 광장과 노동현장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고, 대선승리는 이천만 노동자 모두의 승리여야 한다.

2017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대선투쟁

대선투쟁 기초

- 1) 재벌개혁, 제조업발전, 노조파괴 금지 등 3대 의제를 집중 쟁점화함.
- 2) 박근혜 체제 적폐 청산의제(노동개악 4법 추진 완전 철회, 노동부 2대 행정지침 철회, 단협시정명령제 철회,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제 철회, 긴급조정권 철회, 타임오프제도 철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철회, 정경유착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완전 해체, 재벌총수 불법수익 환수 등) 쟁점화를 병행하면서 내부 투쟁 현안을 완전 해결함.
- 3) 새 대통령 체제에 대응하는 노동존중 평등사회 추진을 위한 대중 동력을 형성함.

대선투쟁 계획

- 1) 3월 14일부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를 <재벌개혁 제조업발전 노조파괴금지 쟁취 금속노조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각 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 2) 투쟁본부 산하 실천단을 구성한다.
- 3) 3대 법안 입법 추진
 - 재벌개혁법은 민변, 재벌개혁연석회의 등과 함께 대선투쟁 속에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입법공청회를 5월 23일(공정거래법 등 상법), 5월 24일(노동조합법), 5월 25일(범죄수익 환수법) 진행한다.
 - 제조업 발전 특별법을 제조연대차원에서 양대노총 대선투쟁으로 공동요구화 한다.
 - 노조파괴금지법은 법안 초안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민주노총 노동개정안으로 삼입하고 금속노조 차원에서 쟁점화 투쟁을 별도 전개한다.
 - 전국순회 쟁점화 투쟁을 위해 재벌개혁! 제조업발전! 노조파괴 금지! 를 위한 금속노조 전국 순회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촛불 광장의 외침, 재벌이 문제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 전국 순회 일정은 4월 11일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 울산, 대구, 광주, 전주, 천안, 수원, 서울 등에서 진행한다.

공공운수노조 대선 정책요구 및 실천 계획

첫째, 좋은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가대개혁 정책요구를 한국 사회에 제안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공공부문의 시급한 개혁 요구를 집약한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 대개혁” 요구> 정책 수립(첨부자료 참고)

- 이 정책을 중심으로 대선 시기에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조합원 참여로 진행, 대규모 집회는 물론, 조합원 참여 선전활동 등 진행

* △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 정책토론회(3.14.) 및 정책요구 발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전 국민 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3.7.) △대선 투쟁방향에 대한 조합원 여론조사(~3.11.), △서울 집결 대규모 집회 : 4월8일(공공기관 중심, 약3만명), 15일(그 외 공공·운수부문 노동자), 22일(청소노동자행진) 등, △17만 조합원 대국민 선전전, 버튼·스티커 부착 등 실천활동, △진보·개혁 후보 투표운동 등 전개

둘째, 이러한 정책요구를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후보의 수용여부는 17만 조합원과 가족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이미 적폐 주역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한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수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대선후보가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수용하는가 여부는 우리 17만 조합원과 가족의 대선후보 지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것임

셋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러한 대개혁에 동참할 것입니다. 개혁대안 제시는 물론 개혁에 앞장서고 기여할 것입니다.

-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현장의 노동자의 공감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 것임. 차기정부에서 민주적인 노사, 노정관계가 형성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개혁을 위한 올바른 대안이라면,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음

넷째, 공공부문 노동자의 연대를 확장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노조(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30만명과 ‘(가칭)국가대개혁산별연석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조합까지 함께 하는 40만명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함께 대선에 대응하고 있음.

-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대개혁을 위한 노동계의 광범위한 연대를 연결하고 묶어내는 고리가 될 것

공공운수노조 대선 정책요구(안)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 대개혁” 요구

조건	요구	세부 내용
경제 위기 대안 →	(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좋은(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재벌 증세로 일자리 자원 마련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공공부문부터 ‘노조할 권리’ 보장(노정교섭, 원청교섭, 필수유지 업무제도 전면개혁, 해고자 복직, 노조조직을 확대 등) * 노동개악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단협 일방해지 제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노동법 개정은 민주노총과 함께 요구함
	(2) 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안전인력 정규직 총원 및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도로교통안전 강화 및 운수업종 노동시간의 특례 폐지 △공공의료 건강보험 강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박근혜 적폐 청산 →	(3) 공공부문 운영 개혁	△‘권력형 낙하산’ 중단 △비정상적인 성과연봉제·퇴출제 운영 폐기 △공공기관운영 법령의 전면개정 △지방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 △공공기관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비대 관료권력 기재부 개편(해체)
	(4)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철도 민영화 중단 및 SRT등의 재통합 △에너지 민영화 중단 및 발전공기업 재통합 △의료 민영화·시장화 중단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 및 재공공화

- (1) 박근혜와 재벌이 망친 한국경제, ‘좋은 일자리’ 는 줄어들고 고용불안, 저임금 확산
→ 공공부문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기본권을 모범적으로 보장해야함
- (2)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는 물론, 송파 세모녀 사건 등으로 국민 생존권 불안 심각
→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사회복지를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함
- (3) 박근혜 정권은 권력 측근 낙하산 및 비대 관료권력으로 국정 농단
→ 공공기관에 낙하산을 제도적으로 막고, 국민과 노동자가 감시할 수 있어야함
- (4)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은 공공부문을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 후퇴로 내몰았음
→ 노골적인 민영화는 물론 기능조정·경쟁체계 도입 등 명목으로 추진되는 민영화 근절

2017년 보건의료노조 대선 요구와 계획

1. 보건의료노조 대선 요구 (5대 프로젝트 50대 세부과제)

①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 100세 국민건강시대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로 보호자없는 병원 완성
-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으로 보건복지부 인력심의위원회 구성과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②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 대한민국 의료컨트롤타워 구축
-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구축
-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과 주치의제도 도입
-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 확대 강화, 착한 적자 보전
- 의료기관 특성별 공공적 발전전략 마련

③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현
-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2배 확대
-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④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등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확대
- 사용자측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교섭대상 확대로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
-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로 산업내 노동시장 양극화·이중화 문제 해결
- 근로감독관 2배 확충, 노동관련법 위반 전면 조사, 단체협약 불이행 조사, 처벌 강화
- 선거제도 개혁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⑤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

- 정권과 재벌의 뇌물-특혜 거래로 탄생한 공공병원의 성과연봉제 전면 폐기
- 의료비 폭등, 의료대재앙 부르는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

2. 보건의료노조 대선 슬로건

“100세 건강사회, 노동존중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모성정원제 실시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균형발전으로 메르스 사태 완전 극복!
-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로 100세 시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조 경영참여 확대로 노동존중 사회!

3. 보건의료노조 대선투쟁 계획

■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공약화

- 3월 15일(수)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정책과제 자료집> 발간
- 3월 15일(수)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정책과제>를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화 요청
 - 정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 후보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심상정, 김선동
- 3월 15일 이후 보건의료노조 대선정책과제 수용하는 후보들과 정책협약식 체결 추진

■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쟁점화

- 3월 16일(목)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발표 및 대선투쟁 선언 보도자료 발표
- 대선후보들의 공약 모니터링 및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와 비교분석하여 쟁점화
-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 대한 논평
- 병원에 보건의료개혁 관련 보건의료노조의 대선요구 시리즈 붙이기
- 4월 17일(월) 노사공동으로 대선후보 초청 정책포럼 추진

■ 2017 대선투쟁

- 3월 25일, 4월 15일 촛불투쟁
- 3월말~4월초 조합원 의무교육시 ‘촛불과 대선, 우리 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교육 실시
- 4월말~5월초 조합원들의 투표 참가를 위한 현장순회와 간담회,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노사협의 추진

서비스연맹 대선의제와 요구

1. 요구 배경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다양한 서비스업종과 직종이 창출되고 있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해왔지만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고객(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약 800만명에 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기업에 의해 강요된 감정표현을 장시간 수행하고 일부 문제행동을 하는 고객을 응대하면서 감정의 부조화와 감정소진의 경험을 하게되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얻게되는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서비스노동자들은 반사회적 노동에 고충을 겪고 있다. 장시간노동, 휴일노동, 심야노동, 감정노동이 그 것이다. 이로인해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일과 삶의 균형이 불가능한 노동조건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양극화의 핵심의제인 비정규직의 문제는 서비스산업에 만연되어 있는 적폐중의 적폐로 공공부문(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비정규직 등)의 공무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통한 고용안정성 제고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주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로 위장되어있는 특수고용 직업군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정비례하여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산업재해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헌법과 노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일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과 서비스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병행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서비스노동자 5대 의제

5대의제	주요내용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노동	장시간노동, 휴일노동, 심야노동 제한

감정노동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고용안정,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생활임금 도입, 최임법 개정
특고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재해 전면 적용

3. 주요 입법

1)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노동

- 실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 유통업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도입, 확대(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노동조건 보장으로 모성보호(남녀고평법, 근기법 개정)

2) 감정노동 예방과 보호

- 감정노동의 가치 인정과 산업재해 인정(산재법 개정)
- 감정노동자 보호와 예방체계 구축(산안법 개정)
- 감정노동자 보호법(특별법 추진)

3.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공무직법 추진)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철폐 추진(비정규직법 개정)

4.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최저임금 결정기관 국회로 변경(최임법 개정)
-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5. 특고노동자성 인정

- 노조할 권리 등 노동3권 인정(노조법)
- 산업재해 전면 적용(산재법, 징수법 개정)

4. 입법추진을 위한 투쟁계획

- 향후 TF팀 회의를 통해서 구체화
- 기자회견, 정책질의, 정책간담회, 정책협약 체결 등

*TF팀

- 임원, 정책, 조직, 교선

전교조 2017대선 핵심과제와 주요과제

학생이 행복한 학교, 민주적인 미래교육

-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행복한 학교,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 입시와 교육비 부담 해방, 배움이 즐겁고 자별없는 행복한 학교-
-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 행복한 사회를 위해-

1. 한국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교육이 모두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높은 교육비 부담과 자녀들의 비인간적인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원과 직원들도 가르침의 보람과 학생들과 인간적인 교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기보다 질곡이 되고 있습니다.

한 때, 한국의 교육은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입시중심교육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비판성, 협력과 소통 능력의 발달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특권교육은 양극화를 심화하고 계급구조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체제의 고통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질곡이 되었으며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 입시중심 교육, 관료 지배 구조, 신자유주의 교육이 교육위기의 3대 주범입니다.

여전히 무조건 암기하고,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낡은 입시중심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오로지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기 위한 입시중심교육은 거대한 사회적 낭비입니다. 낡은 입시중심 교육 때문에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창조적 힘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는커녕 현재적 요구에도 제대로 부응할 수 없습니다. 입시중심 교육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해방 후, 70년 동안 한국의 교육체제가 거의 변화가 없었던 핵심적인 원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들이 교육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고위 교육관료 대부분은 교육의 경험도 전문성도 전혀 없는 행정 고시출신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손에서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교육적 원리에 충실한 정책이 나올 리 없습니다. 오히려 이화여대 사태를 촉발한 영터리 대학재정지원 평가사업이나 자금의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장기적인 전망보다는 권력자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기적 성과를 내는데 급급할 뿐입니다. 백년지대계는커녕 십년지대계도 없었습니다. 교육 관료들에 의한 교육지배 구조를 깨트리지 않는 한 제대로 된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1995년 이래 지난 20여 년 간 경제관료와 교육관료들에 의해 반교육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적 원리보다는 경쟁과 시장논리만 중시하였습니다. 일제고사와 특권 학교를 도입하여 소모적인 경쟁과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성과급, 성과연봉제, 교원평가 등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논리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구조조정을 앞세우면서 비정규 교원과 비정규 직원을 대량 양산하여 교육현장을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의 증가는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기반을 파괴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여 입시중심교육을 끝내야 합니다.

역대정권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학입시제도를 손질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의 근원에는 학력차별과 대학서열에 근거한 상위학벌 취득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경쟁은 깊은 경제적·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선발-공동교육-공동학위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건설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고 입시경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학 네트워크의 건설은 대학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사립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교육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정도가 생존을 위한 스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비용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부터 임금과 승진까지 학력차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관료들이 주도하는 교육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교육의 당사자들인 교육주체들과 교육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의 교육부처럼 모든 정책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자치, 학교자치, 대학자치 확대와 함께 가야합니다.

○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으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높은 교육비 부담, 과밀학급-거대학교 등 열악한 교육환경, 비정규직 교직원의 낮은 처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GDP 대비 6~7%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친환경 급식, 20명까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합니다.

○ **민주적 학교 건설로 혁신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혁신학교의 실험을 통해 학생의 발달과 행복이 가능한 교육,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혁신교육의 성공의 열쇠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력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건설입니다.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 기초한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 대학평의회 민주화-실질화, 교장보직제 도입 등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민주의식, 창의성, 비판적 의식, 협력-소통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수업의 혁신도 가능해집니다.

3. 5대 핵심 과제와 9대 주요과제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 입시중심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 대학서열 해소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 교육의 민주성과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경쟁보다 협력,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확산’**
- 교육복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실시’**

교육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9대 주요과제

<교육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

-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 **‘특권학교 폐지’**
- 지역공동체의 요람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 교육공공성 강화의 핵심 **‘사립학교 민주화’**
-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교육의 출발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 수업혁신과 대학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 경쟁보다 협력을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교육주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요과제>

- 평등한 학교는 평등한 사회의 출발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 권리와 지위향상’**
 - 교직원의 권리보장은 민주학교의 출발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보장’**
-

건설노동자 대선 6대 쟁취요구 25대 세부의제

3대 청산요구	6대 쟁취 요구		25대 세부의제
부패, 비리, 착취, 재벌 독식	건설산업 구조개혁	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도로 및 시설 교체, 내진의무 확대, 발주 자 및 원청의 안전예방 의무강화, 입찰제한 등 처벌 강화 및 위험외주화 금지 등 안전우선 건설산업 · 건설현장 안전보건노사협의체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공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서민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복지시설 확충 등 주거복지 보장 · 노동이사제 도입 · 취업센터 및 기능학교 공공성 강화 · 공정·상생을 위한 적정 입·낙찰제도 도입
		환경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복원, 생태공원조성, 에너지절감, 친환경자재 등 친환경기반 건설산업 · 원전설비 비중 축소와 친환경 발전설비 확충
	다단계 하도급 근절, 직접시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단계 하도급 근절 및 처벌 강화 · 직접시공제 확대 · 건설현장 전자인력카드제 및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건설산업 기반 조성 · 외국인력 불법고용 근절
건설노동자 소득불평등	노동조건 개선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임금 제도 도입 · 건설기능인 육성 및 처우개선책 마련 · 건설노동자 악천후 유급휴가 법제화 ·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퇴직공제 인상 및 적용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인상 적용공사 확대 ·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적용 · 퇴직공제금 발주자 직접납부
		4대보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4대보험료 발주자 직접납부 ·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확대 · 건설기계종사자(1인사업자포함) 산재보험 원청 일괄 적용 및 구상권폐지
건설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노동자 범위 확대)
	건설노동자 산별(원청)교섭		· 원청 사용자 인정 노동조합법 개정
	공안탄압분쇄		·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선투쟁 주요 요구와 계획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로 출범 15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외노조로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누구나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요건과 절차를 갖춰 정당하게 설립신고에 나섰던 공무원노조에 대해 무려 5차례나 반려함으로써 노조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공직사회 최대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불법단체로 매도하며 설립신고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설립신고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의 원손인 공무원노조를 즉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노동조합 관련 활동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요구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정권유지 도구로 동원되어 온 오욕의 과거를 끊어내고 온갖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역사성과 정당성을 갖는 일대 사건이자 사회운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탄압은 악랄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려 2,94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135명의 해직자는 10년이 넘었지만 복직을 못하고 열분의 동지들은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18대19대국회에서 발의 되었으나 법안처리가 되지 못한 것을 20대국회에서 진선미의원외24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당연한 권리행사 과정의 희생자들의 무조건

적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원직복직이 이뤄져야 공직사회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3.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 성과연봉제 폐지

공직사회 성과주의는 경쟁과 성과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입니다. 초법적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성과퇴출제 도입을 예고했던 정부는 마침내 2016년,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리는 쉬운 해고를 전면화 하려고 합니다. 애초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불가능한 평가방법으로 모든 공무원을 서열화 해 저성과자로 지목되면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과퇴출제 ·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이익과 생존을 가장 우선시 하게 해 공직가치를 훼손하고, 동료 간 경쟁을 강요해 협력체계를 파괴시키고, 평가주체인 상급자에 대해 복종을 강요하고 사실상 임금삭감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E(제너럴 일렉트릭), MS(마이크로 소프트)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신자유주의의 총본산이라는 미국조차 공공부문에 도입했던 성과주의를 폐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처럼 공무원을 통제하고 무조건 복종시키려는 성과퇴출제 ·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4. 정치기본권 보장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모두의 기대는 이번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말할 수 없고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라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후원할 수도 없고 원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도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해외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유럽국가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조차 없습니다.

당사자의 권리 신장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공무원·교사의 정당 및 후원회 가입허용과 정치자금 기부 허용등 정치·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기본권보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25일 광화문광장에서 공무원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통해서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을 알려내고 대선후보에게 우리의 요구를 현실화 하도록 강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 노동조합 설립신고 - 5차례나 신고반려 사실상 허가제로
- ② 해직자 원직복직 - 2,944명 징계받고 해직자는 135명 달해
- ③ 성과퇴출제 폐지 - 공직 가치 훼손하는 공무원 통제수단
- ④ 정치기본권 보장 - 정치 중립성 빌미로 지지정당 후원 막아
- ⑤ 행정실 법제화 - 직원 사기 떨어뜨리고 업무분장 불분명해
- ⑥ 상하수도 민간위탁 중단 - 민간에 20~30년간 관리운영권
- ⑦ 시간선택제 폐지 - 기존 공무원과 업무갈등 나쁜 일자리
- ⑧ 임금 수당 현실화 - 수당 인정 1시간 공제 4시간 상한 설정
- ⑨ 인사제도 개선 - 5, 6급 정원비율 확대 승진적체 해소해야
- ⑩ 연금제도 개선 - 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로 환원해야

[참부자료] 민주노총 2017 대선 의제와 요구

박근혜·재벌체제 청산, 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

- 민주노총 2017 대선의제와 요구 -

박근혜 적폐청산·재벌독식체제 해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실현, 노동3권 보장
연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와 사회공공성 강화

1. 기초

○ 광장의 촛불 민심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제 청산'을 요구

- '이게 나라냐' 라는 촛불 시민의 탄식 속에는 박근혜와 부역자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들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려야 한다는 열망이 담겨 있음.
- '헬조선'에서 '흙수저'로 태어나 'N포세대'로 살아가며 박탈감과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에게 '돈도 실력'이라며 대못을 박은 정권, '사오정', '오륙도'의 가시밭길을 지나 가까스로 정년에 이른 '58년 개띠'들에게 자식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모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씌우며 '노동계약'을 합리화한 정권,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으로 살아가는데도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주권자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음.
- 촛불 민심은 박근혜의 퇴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벌독식 체제, 저임금·비정규직 일터, 위험사회, 군사적 긴장, 공안통치 등 박근혜 체제의 온전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음.

○ 광장의 촛불 민심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

- 박근혜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체제는 노동계약·역사국정교과서·사드배치 등 박근혜 표 정책을 강행하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1의 공범자인 황교안은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또한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한국사회 적폐의 핵심이라 할 재벌들은 삼성 이재용의 구속 영장 기각에서 드러나듯, 민주주의를 우롱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재확인시키고 있음.
- 박근혜 즉각 퇴진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좌고우면하던 보수 야당들은 탄핵 의결 이후 대선 국면에 돌입하여 저마다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광장의 적폐청산-사회대개조 요구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대선, 박근혜 체제 이후 새로운 한국사회의 전망을 논의해야

-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으로 발생한 정치적 격변기이자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구

조적 모순이 심화하는 위기 속에서 치러짐. 민주노총은 2017년 한국사회의 ‘위기와 이행’ 을 둘러싼 대분기 속에서 펼쳐질 대선에서 ‘박근혜 체제 청산’ 과 ‘대안사회 전망’ 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광장에서 분출된 적폐청산-체제전환 단순히 정권교체나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재벌 배불리기’ 가 아닌 ‘노동자·서민 살리기’ 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촛불민심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과 모든 민중의 존엄한 생존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 공동체의 해체와 붕괴를 낳기에 이른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꿈꾸고 있음.

○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시작, 2017년 대선

- 우리가 새롭게 건설할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노동에 기초(기반)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보편적/기본적 권리는 자본주의적 소유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노동권이어야 함.
-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재벌 체제 청산과 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 을 핵심 기치로 하여 ▲박근혜 적폐청산·재벌독식체제 해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 적용률 50% 실현, 노동3권 보장 ▲연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핵심 구호로 제시함.

2. 슬로건과 비전

슬로건	박근혜·재벌 체제청산! 노동존중 평등사회!
비전	박근혜 적폐청산·재벌독식체제 해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실현, 노동3권 보장! 연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와 사회공공성 강화

○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은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

- 민주노총은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점인 ‘재벌독식 불평등사회’ 를 지양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 를 2017년 대선의 핵심 화두로 제시함.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은 노동에 기초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이며, ‘평등’ · ‘민주’ · ‘안전/공공성’ · ‘평화’ 를 주요한 작동 원리로 제시함1).
- ‘재벌독식 불평등사회’ 의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을 사회의 근본으로 세우는 것과 더불어 모든 노동자·민중의 존엄한 생존권이 보장되고 공동체의 해체와 붕괴를 낳을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평등사회 건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임.

1) 참고로 이탈리아 헌법 제1조는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 여기서 ‘노동에 기초한’ 구문은 이탈리아 반파시즘 노동자투쟁의 결과로 1947년 명문화 됨.

- 박근혜 게이트는 현재 한국사회에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 줌. 청와대 공작정치·공안통치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억압되었으며,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국민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득권 체제임이 드러남. 새로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
- 실업·산재·주거·출산·보육·보건·노후 위험/불안 등 사회적 불안과 위험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여 노동자·시민의 사회적 안전(사회보험·사회복지·사회공공성 확대,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중단)을 보장하고, 한반도·동북아 전반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평화 체제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함.

○ 노동존중 평등사회 ① - 박근혜 적폐청산 . 재벌독식체제 해체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

-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부정부패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경제위기·나쁜일자리·슈퍼갑질의 주범인 재벌의 독식체제를 해체해야 함. 재벌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는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거짓 신화를 넘어 노동자-서민 살리기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 노동존중 평등사회 ②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월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불안정 노동사회, 산재사망률 OECD 1위의 지옥일터를 벗어나 모든 노동자가 존엄한 생계와 안정적인 일자리, 안전한 일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일자리의 좋은 일자리 전환, 위험업무의 외주화 중단 및 하청산재 원청책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노동존중 평등사회 ③ -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실현, 헌법33조 복권 . 노동3권 보장!

- 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의 맹점과 정부·사용자의 노동탄압으로 노조 조직률이 십 수년째 10% 근방을 맴돌고 있음.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복권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임금과 고용 등에 관한 노동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고,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 적용률 50%로 확대하여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함.

○ 노동존중 평등사회 ④ - 연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 ‘헬조선’과 ‘흙수저’, ‘N포세대’라는 청년의 자조를 방치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 리 없으며 저녁도 주말도 없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쳇바퀴를 도는 일상에 희망이 깃들 리 없음.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청년과 실업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삶과 노동의 균형을 보장해야 함.

- 노동존중 평등사회 ⑤ -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 저임금·비정규직의 불안과 해고·실업의 위험을 완충하기 위해서 의료·교육·보육·주거·노후 등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충되어야 함.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애를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3. 5대 의제·10대 요구

5대 의제	10대 요구
체제 청산	① 박근혜체제 적폐청산 ② 재벌독식체제 해체
비정규직철폐. 좋은 일자리	③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④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노조할 권리. 노동3권	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⑥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사회공공성. 사회안전망	⑦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⑧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민주주의. 평화사회	⑨ '보수정치 독식구조' 개혁과 자유권 보장 ⑩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

4. 10대 요구 세부내용

1) 개요

(1) 박근혜체제 적폐청산

	세부 요구
공안통치.국정농단세력 청산	① 박근혜 구속 ② 새누리당 등 공범정치세력 청산 ③ 정치검찰.경찰.국정원 등 공안통치기구 청산 ④ 공공기관장 등 박근혜 낙하산 인사 척결
박근혜표 노동개약 폐 기와 원상회복	⑤ 재벌 뇌물대가 노동개약 4대 악법 폐기 ⑥ 쉬운해고 지침·취업규칙변경 지침/공공부문-성과퇴출제/단체협약 시정지도지침 폐기 ⑦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 복권 ⑧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⑨ 정부 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및 노동탄압으로 인한 해고노동자 복직 ⑩ 노동조합 활동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 ⑪ 노조파괴 컨설팅 근절과 책임자 처벌

경쟁유착 근절, 재벌 특혜 청산	⑫ 재벌 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⑬ 재벌 범죄이익 몰수와 재벌 특혜 환수 ⑭ 재벌 경영세습·편법/위법 상속증여 방지 ⑮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폐기 ⑯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 ⑰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폐기
반민주·위험사회 청산	⑱ 세월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⑲ 백남기 농민 사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⑳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 재벌독식체제 해체

	세부 요구
경제위기 재벌 우선 책임/ 재벌에게 경제위기 책임을	① 재벌총수 최고경영진 우선 책임 입법 ② 총고용 보장과 하청노동자 임금·고용 사용자 책임 ③ 제조업 발전 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재벌공간 열어 좋은일자리/ 재벌에게 조세 책임을	④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⑤ 초과이윤/사내유보금 사회환수 ⑥ 재벌 불법·편법이익 환수와 부자증세
진짜사장 재벌 나와라/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⑦ 재벌 대기업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⑧ 재벌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⑨ 재벌(원청대기업)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
슈퍼갑질 이제 그만/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⑩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보장 ⑪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인 보호 ⑫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3)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세부 요구
최저임금 1만원	①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 ②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 없는 일터	③ 기간제법·파견법 폐기 ④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 의무화 ⑤ 불법파견 금지·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⑥ 비정규직 권리 보장 ⑦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금지 법제화
안전한 일터	⑧ 중대재해 기업 처벌 특별법 제정 ⑨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⑩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⑪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인정기준 확대
차별 없는 일터	⑫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⑬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폐지와 권리보장
해고 없는 일터	⑬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의무적 단체교섭사항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⑮ 저성과 해고제도 도입 폐기 ⑯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해고제도 규제 ⑰ 확대해고, 일터 괴롭힘 방지 제도화
성평등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⑱ 성별임금격차 해소 ⑲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 승진, 임금 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마련 ⑳ 성희롱 행위 기업주 책임 강화 ㉑ 여성노동자 직업병 산재인정 확대 ㉒ 만 2세 미만 육아기 모든 노동자에게 주 35시간 노동 우선 적용 ㉓ 모든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수당 지원 ㉔ 여성에게 집중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단 ㉕ 일 생활 돌봄의 균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기구 구성
저임금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㉖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임대료) 제도와 화물 표준운임제 도입 ㉗ 임금체불(유보임금 포함) 근절과 피해노동자 구제
생활임금 보장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㉘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㉙ 노동착취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금지 ㉚ 성과주의 임금체계 강요 중단·폐기

(4)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세부요구
좋은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좋은 일자리 만들기 ② 공공투자, 공공서비스 획기적 확대와 생명안전 일자리 확충으로 좋은일자리 만들기
장시간노동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④ 연 1800 노동시간 상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5)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세부 요구
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② 간접고용 원청사업주 사용자책임 인정 ③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④ 사실상의 ‘노조설립허가제도’ 개선 ⑤ 타임오프 제도 폐기·노사자율 보장 ⑥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활동 탄압 금지 ⑦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파업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정리해고,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쟁의권 보장 ⑨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금지 ⑩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금지 ⑪ 필수유지업무 조항 폐기·최소유지업무 신설 ⑫ 쟁의행위 시 원청 대체인력 사용 금지 ⑬ 직장폐쇄 제한 ⑭ 군 대체인력 사용 관련 재난 및 안전기본법 개정 ⑮ 집회시위활동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청구 제한

(6) 산별교섭 활성화,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세부 요구
산별교섭 활성화 등 노사 자율교섭권 보장	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기·자율교섭 보장 ②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부문 노정교섭 보장, 산별교섭 의무화 ④ 산별협약 등 초기업단위 단체협약 효력 확장 ⑤ 조례나 지침에 의한 단체협약 개악 금지 ⑥ 노동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⑦ 노사정위원회 폐지

(7)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세부 요구	
7대 영역 평생복지	공공보육 확대	①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② 맞춤형 보육 폐지 ③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 강화 ④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강화: 정원초과지침 폐기, 2교대제 도입 등
	무상교육 확대	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⑥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⑦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고용안정망 강화	⑧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실업자 ⑨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⑩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 1일 상한액 최저임금 120%
	공공주택 정책 강화	⑪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20% 이상 확대
	공적연금 강화	⑫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명목 소득보장 55% 이상 보장 ⑬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와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⑭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⑮ 건강보험 누적후자(20조원)의 즉각적 보장성 강화 사용 ⑯ 건강보험 보장성 최소 90% 확대 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 상시화, 법정 기준 준수와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⑲ 빈곤선 현실화: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
사회공공성 강화	복지 자원 마련	⑳ 법인세 인상 등 재벌 납세 책임 강화 ㉑ 소득세 인상: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공공부문 운영 민주화	㉒ 정부의 공공부문 돈벌이 운영, 민영화 정책 방향 폐기 ㉓ 돈벌이 운영 중심인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분리 등 공공기관운 영법 전면개정 ㉔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 시민 참여로 민주적 운영, 공공성 강화 ㉕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공성 평가로 전환 ㉖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로 권력형 낙하산 방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㉗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즉각 철회 및 수서발 KTX 코레일 재통합 ㉘ 버스: 준공영제와 민영제의 완전공영제 전환

		㉔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의료민영화 중단 / 공공의료 강화		㉕ 제주 영리병원, 지방의료원 폐원 등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㉖ 지역 거점 공공병원 설립·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㉗ 적정의료 보장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충(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 법 제정)
에너지 민영화 중단생 태친화적 에너지 체계 전환		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철회 ㉙ 노후 핵발전소 즉각 가동 중단 및 재생에너지 체계 전환
연금기금 운용 민주주의 강화공공투자 확대		㉚ 연금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선 ㉛ 연금기금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 ㉜ 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㉝ 연금기금의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공공성 강화		㉞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GDP 1% 수준의 고등교육예산 확보 ㉟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및 사립대 공영화 추진 ㊱ 교수확보율 100% 의무화 및 시간강사 인건비 정부지원

(8)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세부 요구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인력확충	① 생명 안전업무 외주화비정규직 사용 금지 ② 시민안전 직결 업무 인력 확충
공공안전 대책 수립	③ 안전한 대중교통 ④ 노후원전 폐쇄와 안전한 산업단지 ⑤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병원인력 확보 ⑥ 규제완화 철폐 ⑦ 공공안전에 노동자시민 참여 구조 보장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⑧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 ⑨ 기업의 안전보건 비용 공시 제도 도입

(9) ‘보수정치 독식구조’개혁과 자유권 보장

	세부 요구	
정치제도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① 전국단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②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종료 시간 오후 9시로 연장 ④ 18세 선거권 보장 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⑥ 의원정수 확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⑦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협동조합 노동자 정치활동 보장
	정당법 개정	⑧ 정당설립 조건 완화
자유권 보장	정치사상·표현의 자유	⑨ 국가보안법 철폐 등 신념과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장 ⑩ 테러방지법 폐기
	집회결사의 자유	⑪ 주요도로 조항 등 경찰당국의 집회금지통고 삭제 ⑫ 제한통고 제도 개정(제한을 빌미로 한 금지약용 차단)

		⑬ 국회, 청와대 등 집회금지장소 조항 개정 ⑭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금지(형법 또는 집시법 개정) ⑮ 소음규제 조항 폐지 ⑯ 물대포 사용 금지, 경찰차벽 설치 금지 ⑰ 집회자유 침해하는 경찰채증 규제 도입 ⑱ 시위진압 경찰의 식별표식 부착 의무화 ⑲ 복면착용 등 자유로운 참가보장(대법원 양형기준 개정)
	언론출판의 자유	⑳ 언론장악 방지법 개정

(10)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

	세부 요구
동북아 한반도 평화	① 사드 한국배치 철회, 한미일 MD 편입 중단 ②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③ 일본 식민지배·전쟁범죄 면죄부, 한일 '위안부' 아합 폐기
남북관계 개선	④ 개성공단 정상화 ⑤ 민간교류 및 인도적 협력 확대 ⑥ 북한 붕괴론 폐기, 평화공존, 화해협력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